

제국-식민지 농가 경제 조사(農家經濟調査)의 지적 계보와 그 정치적 의미¹

김인수†

1.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착취, 점령과 식민 지배의 힘의 실체로 작용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왜소성, 그것이 이웃 민족 사회의 정치적 삶에 미친 폐해와 상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 경영과 비교할 때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구축한 군사력과 경찰력의 규모, 그리고 폭력 기구가 식민지 사회로 침투하는 정도가 월등했음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이다.

²⁾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식민 지배’란 점령이라는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고, 이 시간의 지속은 폭력으로 매개된 이질적인 사회 및 타자에 대한 계속적인 압의 의지가 발동되는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

1) 이 논문은 2014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29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iskim94@gmail.com

2)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東京: 校倉書房, 2009); 강창일, “조선 침략과 지배의 물리적 기반 조선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491-522;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4 (1994), 208-22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역시 이 점에서는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10년 일제가 대한 제국을 강제 점령한 이래 식민 국가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 관한 여러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 총독부통계연보]의 편찬 과정에서 알 수 있듯 공식 통치 기구를 통해 정례적으로 보고·수합되었던 일반적인 행정 조사는 물론, 체계화된 법제의 구축과 긴급한 사회 정책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수행된 각종 관습 조사 및 관행 조사가 존재했다. 또 식민지의 사회·문화적 속성을 추출하기 위한 학술 연구의 성격을 띤 조사들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들을 구태여 식민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까지 명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타자에 대한 지식 생산에 기초한 식민 지배의 한 양상을 가시화하는 소재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조사는 그 형태상 몇몇 단편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데에 그친 것도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식민지 현실을 수치로 재현하고 추상화한 이른바 ‘사회 과학적 실천’의 모습을 띤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 과학은 사회 및 실재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description)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특정한 지표와 방법적 매개를 통해 ‘추출’해내고 이를 ‘가공’해 감으로써 사회를 설명(explanation)할 수 있다는 독특한 믿음 체계 위에 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계수화(enumeration)는 그 자체로 사회 과학 지식 생산의 한 양태인 동시에, 2차적 인용 및 참조를 통한 지식 재생산의 토대를 이룬다. 이것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는 제법 중요하다. 우선, 사회 조사의 결과물인 사회 통계 자료는 사회 과학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일쑤다.

³⁾ 나아가, 사회 조사는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 정책을 입안하는 인식의 기초이다 (evidence-based policy).⁴⁾ 사회 조사를 통해 구성된 개념이나 범주는 사회 정책, 심지어는 사회 운동의 의제와 방향성을 결정짓기도 한다.⁵⁾

사회 과학이 갖는 이러한 속성은 이른바 ‘식민지 사회 과학’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식민 국가가 수행한 조사들 가운데 대단히 진전된 계수화의 양태를 보이는 조사의 대표적인 예로, 인구 조사[國勢調査], 소작 관행 조사, 농가 경제 조사 등을 꼽을 수

3) 김경동·이은숙, [사회조사 연구방법] (박영사, 1986).

4) Reiner Grundmann and Nico Stehr, *The Power of Scientific Knowledge: From Research to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Nancy Cartwright and Jeremy Hardie, *Evidence-Based Policy: A Practical Guide to Doing It Bet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y Pawson, *Evidence-Based Policy: A Realist Perspective* (London: SAGE, 2006).

5) Ian Hacking, “Making up People,” in Thomas C. Heller, Morton Sosna, and David E. Wellbery, eds., *Reconstructing Individualism: Autonomy, Individuality, and the Self in Western Though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김인수, “범주와 정치: 식민지 조선의 소작관행조사의 사회적 결과”, [일본역사연구] 38 (2013), 149-183.

있다. 이들 조사의 결과물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 성격 논쟁에서 ‘일차 자료’로 빈번히 활용되었고 각종 식민 정책의 근거로도 활용된 바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식민 국가에 의해 수행된 농가 경제 조사의 계보와 그것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⁶⁾

그 동안 농가 경제 조사의 결과로 산출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그려낸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어 왔다. 식민지 농정의 실체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장 안에서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논자들은 이들 자료를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해 왔다.⁷⁾ 특히, 이 자료들은 인구·산업·경제 통계로 통칭되는 식민지 경제 생활의 거시 지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시 지표로서 그 지위는 매우 공고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역사학계 및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들 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을 ‘실증 연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고는 ‘실증’으로 표현되는 종전의 자료 활용 및 연구 태도와는 달리, 사회조사론의 관점에서 이 ‘객관적인 자료’의 생산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 본고에서 사회 조사론이라고 하는 데에는 ‘지식의 존재 구속성’을 강조하는 일반적 형태의 지식 사회학의 이론적 자산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뛰어넘어 이른바 ‘지식 생산의 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 production)을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지식 생산의 물리적 조건과 개념화·범주화의 양태 등이 식민지 농정에 미친 인식론적 차원의 영향에 관한 분석을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 조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저 수동적인 사실의 기술이나 단순한 기입의 행위가 아니다. 사회 조사는 사회 문제에 대한 특정한 상을 설정한 조사자가 자신이 선택한 개념과 범주에 기초하여 현장에 나가 정보를 모으고 ‘사실’을 산출해 내는 능동적인 실천이다. 사회 조사에서 구사되는 개념과 범주는 조사 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산출되는 사후적인 무엇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조사자의 뇌리 속에서 선택·결정되어 질문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⁸⁾ 이런 점에서, 종종 사회 조사의 결과물로 제출되는 사회 통계는 사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진실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사회를 재현

6) 식민 국가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그리고 소작 관행 조사에 대해서는 김인수, 앞 논문을 참고할 것.

7) 梶村秀樹, “1910년대 조선의 경제순환과 소농경영”, 안병직 편,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비봉출판사, 1989), 227-285; 이현창, “구한말·일제초 농가 경영의 구조와 상품화폐경제”, 김흥식 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민음사, 1990), 177-247; 이경란, “1910년대 농가부업과 농가 경제”, 『역사문제연구』 2 (1997), 195-246; 松本武祝, 『植民地力と朝鮮農民』(東京: 社會評論社, 1998); 이송순, “일제하 1930.40년대 농가 경제의 추이와 농민생활”, 『역사문제연구』 8 (2002), 79-123; 이송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 경제 분석”, 『사학연구』 104 (2011), 83-122;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8) 최정운, 『지식 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 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삼성출판사, 1992).

(representation)해낸 하나의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조사자가 어떤 조사 재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 하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여 지표화한 것인지, 다시 말해 조사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조사의 권력 효과, 정치 작용을 파악해내기 어렵다.

본론에서의 논의는 우선 농가 경제 조사의 계보, 즉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간의 농가 경제 조사의 연쇄 및 내적 변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조사는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 목적과 방법의 결정, 조사 대상의 확정, 재정적 뒷받침, 학술 능력의 완비, 조사 인력의 총원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조사가 단일한 하나의 체계일 수 없고 역사적·사회적으로 부침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조사의 양식은 국가의 통치력 또는 사회의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표본의 추출 방법과 조사 방식의 변화 과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농가 경제 조사는 근대 이래 일본에서 이루어진 농가 경제 조사의 이론과 방법론을 차용한 것으로, 일본과 조선의 농가 경제 조사가 그 목적, 형태, 결과에서 서로 어떻게 같고 달랐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식민성의 흔적을 가시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근대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의 계보와 특성

1) 부기 조사 이전의 농가 경제 조사

① 사이토 만키치의 조사

근대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는 우선 부기 조사(簿記調査) 이전과 이후로 시기가 나뉜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부기 조사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1913-1915년 제국 농회가 주도한 농가 경제 조사는 조사 위원회의 계획을 통해 '농가 개황 및 재산 대장, 결산장', '현금 출납장, 현물장, 각장(各帳)', '일지' 등의 장부를 마련한 가운데 조사가 실시되었다. 농가의 세부적인 수익·지출 구조와 농가 수지의 결산은 이 부기 조사를 통해 비로소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해진다.

근대 일본에서 농가 경제 조사의 시작은 1890년대 이후의 일로, 일본 국민 경제의 성장으로 화폐 경제가 점차 농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농업자의 경제 생활 전반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지되면서 소규모로나마 심문 조사(尋問調査)의 형태로 진행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부기 조사 이전의 대표적인 조사로서 농가 경제 조사의 효시에 해당하는 것이 사이토 만키치(西藤萬吉)의 조사이다. 사이토 만키치는 농상무성 농사 시험장 기사로, 농상무성의 명령으로 1890-1920년 동안 수 차례 걸쳐 일본 전국 41개 촌에서 실시 조사(實地調査)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표본으로는 각 촌락에서 지주, 자작농, 소작농이 각각 1호씩 선정되었다. 조사의 항목은 우선 농가와 농촌을 분리하여, (1) 농가 세대에 관해서는 '개요', '가(家)의 개황', '수입', '지출'을, (2) 농촌에 대해서는 '논밭 경작 규모별 인구', '논밭의 세입', '농지 가격', '경지 소유 면적의 광협(廣狹)에 따른 지주의 호수(戶數) 및 그 경작 규모', '농지 부담(조세 공과 등)' '농가의 부채와 금리' 등이었다. 조사 방법은 심문 조사·청취 조사였다. 1920년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농가의 기억을 조사 담당자가 청취하여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1908년, 1899년, 1890년에 관한 정보는 면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집되었다.

사이토의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농가 세대의 지출 항목의 조사 사항에서 '음·식료품', '교제비', '의류' 등의 일반 가계 지출과, '비료 구입', '비료 구입 이외의 농가 경영비' '임시 고용인 급료' 등 농업 경영 지출이 서로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⁹⁾ 이 점을 통해 이 단계의 조사에서는 아직 '농가 경영'의 발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9) 農林經濟局統計調査部, 農林省統計調査要綱輯覽(農家經濟調査の部其一)(1958), 1-3.

(2)

支 出										
種 別										
任 宅 修 繕 費	衣 類	諸 負 担 額	同 購 _買 の _他 品	同 魚 類	同 酒	同 味 噌	同 醬 油	同 塩	同 麦	飲 食 料 品 米

收 支 差 引	合 計	雜 費	社 寺 等 の 寄 附 金	臨 時 雇 給	常 雇 人 給	交 際 費	教 育 費	買 肥 _外 の _農 業 _經 營 _費	買 肥	薪 炭 油 類	備 品 什 器 等
------------------	--------	--------	---------------------------------	------------------	------------------	-------------	-------------	--	--------	------------------	-----------------------

그림 1. 사이토 만키치의 농가 경제 조사(1920)에서 지주 지출에 관한 조사 항목

② 지역 농회의 조사

사이토의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농상무성 뿐만이 아니라 지역(府, 縣)의 농회에서도 농가 경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교토 부 농회의 오시마 쿠니사부로(大島國三郎)와 시마네 현 농회의 센고쿠 고타로(千石興太郎)가 각각 실시한 조사가 대표적이다. 우선, 1911년 실시된 교토 부 농회의 조사는 농가 경영의 상태를 파악하여 장래 농사 개량을 장려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조사 방법은 부내의 각 군에서 경제 상황과 자연 조건에서 '중용(中庸)'에 해당하는 장소(22개소) 내 중등(中等) 농가에서 각 1명을 선정하여 조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가(自家)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사 장부에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장(記帳)하게 한 조사로서 자기 기입식 조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각 작물이나 사업에서 노동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게 한 것으로, 이는 농업 경영상의 참고 자료로서 중요하고 일본과 같이 소규모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일가의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동력은 남편(가장), 아내, 장차남, 조부모, 장차녀, 아동, 하인, 하녀, 일용 노동자, 우마(牛馬) 등이 작업별로 1일 동안 해내는 노동량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농가 노동 일지(日誌)에 기재하도록 했다. 인구학적 자료로서 해당 인원의 연령과 건강 상태도 조사되었다.¹⁰⁾ 후술하겠지만, 이렇듯 가계 노동력의 현황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의 형태를 파악하려는 관심은 이후 일본 및 식민지에서의 농가 경제 조사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시마네 현 농회의 조사는 부락 조사, 경제 상태 조사, 호구 수와 노동력 상태 조사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력 상태 조사의 경우 노동력의 월별 사용 상황과 1개년 간 각 호별 노동력 사용 현황 등이 조사되었다. 각 농가의 지출 항목이 (1) 생산비, (2) 생산비, 생계비 가계 지출, 비 생계비 가계 지출, 기타 지출로 세분화되어 조사·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¹¹⁾ 이들 교토 부와 시마네 현 농회의 조사는 사이토의 조사에 비해 농가 경영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심이 강조되고 있었다.

2) 부기 조사 이후의 농가 경제 조사

① 제국 농회의 조사 (1913-1915)

1913년에는 농상무성의 계획과 농회 보조금 지급으로 제국 농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적 규모로 농가 경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 조사는 1913-1915년에 걸쳐 실시되었다.¹²⁾ 제국 농회는 다수의 학자와 실업가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두고 조사 내용을 심의·결정하였는데, 부기의 양식은 스위스 라울의 단식 부기(單式簿記) 방법이 채용되었다. 장부는 ‘농가 개황 및 재산 대장, 결산장’, ‘현금 출납장, 현물장, 각장(×帳)’, ‘일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가계 계산과 농업 경영의 순수익 및 생산비 계산이 가능해졌다.¹³⁾

이 조사에서 가장 방식은 제국 농회가 훈련시킨 부현(府縣) 농회 기술원의 지도하에 각 농가가 스스로 가장하게 하는 자기 기입식이었다. 조사 농가의 표본은 각 부현에서 2개 군마다 1호의 농가가 선정되는 비율로 하되, 경지 면적, 경영 내용(미작, 맥작, 양잠, 부업 등)의 측면에서 그 지방의 중용 농가(中庸農家)를 선택하는 유의 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집계는 제국 농회가 전국에서 모은 장부를 직접 집계한 중앙 집사 방식(中央集査方式)이었다. 실제로 집계된 장부는 1913년도 160호,

10) 같은 자료, 9-23.

11) 같은 자료, 33-45.

12) 결과 보고서는 帝國農會編, 農家經濟調查(大正 2 年度)×(1918); 農家經濟調查(大正 3 年度)×(1918); 農家經濟調查(大正 4 年度)×(1919)로 간행되었다.

13) 農林經濟局統計調查部, 農林省統計調查要綱輯覽×(각주 8), 52.

1914년도 127호, 1915년도 84호였다.¹⁴⁾

조사를 통해 산출된 항목은 농업용 토지 면적, 농업용 총재산, 농업용 순자산, 농업 총수익, 농업 경영비(현금 지불+현물 지불+자본 감가+가족 등의 노동 보수), 농업 순생산, 농업 소득, 농업 이외의 재산, 농업 지출, 가계비 지출이었다. 이 조사는 “자작·소작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농업 경영을 관념화하여 그 수익률을 계산하고 농가 소득 및 가계비를 계산하여 농가 경제의 전체적 구성을 밝히려는” 목적 위에서 실시되었다.

제국 농회의 이 조사는 요코이 기요시(横井時敬), 사이토 만키치, 미마쓰 다케오(三松武夫), 이토 테이쥔(伊藤悌藏), 우도 요시오(有良夫), 사토 간지(佐藤寛次), 이시구로 다다야쓰(石黒忠篤) 등의 위원들을 위촉한 가운데 실시되었는데, 주로 사토 간지와 요코이 기요시가 크게 기여하였다.¹⁵⁾ 이 조사의 양식은 이후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의 모범이 되었다.¹⁶⁾ 특히, 사토 간지는 당시 제국 농회 농가 경제 조사 위원회가 개설한 감습회에서 부기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사원들에게 강의하였고, 조사를 진행해 가면서 각 방면에서 제출된 실제 문제에 관한 질문들에 일일이 회답해 갔는데, 여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의 부기(農家の簿記)』라는 책을 묶어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당시 조사의 개별 항목별 부기 처리의 구체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13년 조사는 가족 노동력 보수를 획일적으로 남자 1인당 1일 40전, 여자 1인당 28전(남성의 70%)로 가정(假定)하여 계산하였고, 고용 노동자의 식비도 가정을 통해 계산하였다.¹⁷⁾

② 농림성의 농가 경제 조사(1920년대)

농림성의 농가 경제 조사는 제국 농회를 통해 1913년에 시작된 조사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1915년까지 실시되고 중지된 이후, 1921년에 다시 재개된다. 이때의 조사는 농가 경제의 곤궁이 심해지고 소작 문제 등 경제 문제가 심화되어 ‘소작 문제 조사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농가 경제 각 부문에 걸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기획되었다. 1913-1915년의 조사가 농가 경영의 순수익을 알아보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반면, 1921년 조사는 이를 간이화하여 농업 소득을 결산의 목표로 잡았다. 조사 계획의 입안자로는 앞서 제국 농회 조사에도 참여했던 요코이 기요시와 이시구로 다다야쓰를 비롯하여, 기무라 슈조(木村修三)

14) 尾.佐藤正『戦前期農家調査の可能性: 過去のハウスホールドから現在を見るために』, 『農家調査マニュアル集成 1』(一橋大農学研究所附 社科院統計情報研究センター, 2008), 3.

15) 帝國農會編, 『農家經濟調査(大正4年度)』(1919), 2.

16) 農林省『更生部編, 『農林省「農家」調査の沿革』と方法』(1940), 1-3.

17) 農林經濟局統計調査部, 『農林省統計調査要綱輯覽』(각주 8), 57.

교수와 제국 농회의 오카다 나라우(岡田溫) 간사 등이 참여하였다.¹⁸⁾ 조사의 표본은 1921년의 경우, 1부(교토 부)와 20개 현에서 각각 표준적인 3개 촌을 선택하여 중용 농가(1.6정보 내외의 경작지)인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을 각각 1호씩 추출하여, 총 189호에 대해 농가 부기를 기장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이 가운데 100호의 농가에서 조사된 결과만 집계에 활용되었다. 참고로, 1922년의 조사는 100호, 1923년의 조사는 130호에 대해 각각 집계가 이루어졌다.

1921년 이래의 농가 경제 조사는 1924년에 이르러 조사 양식에서 큰 전환을 맞이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내각에 임시 산업 조사국이 설치되어 일본 정부가 산업 합리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농상무성은 농가 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농가 경제 조사에 기초 자료로의 성격을 부여했다(『現狀調査』). 그리고 이 농가 경제 조사와는 별개로, 지도 농가를 설정하고 그 농가에 경영 개선 지도를 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농가 경영 개선 조사(『改善調査』)가 개시되었다. 말하자면, 농가 경제 조사는 개선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였고, 농가 경영 조사는 개선의 내용을 드러내는 지표로 설정되었던 셈이다. 이들 자료 간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조사 간의 연계가 필요했고, 경영 조사에서 부문별 생산비의 측정이 중시되기 때문에 경제 조사도 이에 맞춰 조사 항목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농가 경제 조사는 농가 경제는 물론 농업 경영 전체를 하나의 조직, 하나의 계산 단위로 취급하는 이른바 회계 부기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간 생산물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농업 경영 조사와의 비교가 필요해진 이후부터는 이를 화폐로 표시하여 기장했던 것이다. 결국, “1921-23년의 조사에서 자가 경영(自家經營)을 통해 얻은 농산물을 자가 경영에 다시 사용한 경우 이 농산물을 경영비로 보지 않아 수입으로도 지출로도 취급하지 않은 것에 반해, 1924년 이후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고 또 지출로도 계상하여 농가 총수입과 농가 경영비가 이전 해에 비해 다액으로 표시”되었다.¹⁹⁾ 이런 배경 위에서 1924년에 실시된 농가 경제 조사의 경우, 전체 표본의 수는 총 232호였다. 이러한 형태의 조사는 193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번잡함만 줄 뿐 실제적으로는 별달리 기여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1931년 조사부터는 중간 생산물의 표시가 폐지된다.²⁰⁾ 여기에는 중간 생산물을 일일이 구별하는 일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소농 경영(小農經營)만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으로, 1924년 농가 경제 조사에서 노동 능력의 측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전 조사에서는 노동 능력의

18) 같은 자료, 80.

19) 같은 자료, 122.

20) 農林省『更生部編, 農林省『農家調査の沿革』と方法』(1940), 4-7.

측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단지 1921년 조사에서 여성 노동을 남성 노동의 0.7 정도로 책정할 것이 언급되는 정도였다.²¹⁾ 이에 비해, 1924년 조사에서는 15세 이상의 성인 남성 노동의 능률을 1.0으로 하고 성별·연령별로 차등화된 노동 능률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독일에서 채용하고 있는 환산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노동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성별	성인남자 (15세-)	성인여자 (15세-)	13-15세	10-13세	7-10세	4-7세	4세 미만
지수	1.0	0.8	0.5	0.4	0.3	0.2	0.1

표 1. 농업 노동 환산율 (나이는 滿)

[출처: 農林經濟局統計調査部, 農林省統計調査要綱輯覽(農家經濟調査の部其一)] (1958), 116에서 정리]

이 농가 노동력의 능률 지수는 각 시기별 조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농가의 소재 노동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제되어 활용되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연령대 별로 노동 능력을 규정·전제한 관념적인 것에 불과했다. 농가 경제 조사에서 노동력의 측정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조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③ 1930년대 이후의 조사

이후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는 1931년과 1940년에 다시 전환을 맞는다. 이 가운데 1931년 조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간 생산물의 계산을 폐지함으로써 1921년의 조사로 다시 회귀한 점이 특징인데, 새로운 점으로는 전업 농가(專業農家, 제1종 농가)와 겸업 농가(兼業農家, 제2종 농가)를 구분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사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편이며, 중요한 점은 농가 경제 조사가 당시의 농촌 갱생 운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 일본의 농촌 지역에서 실시된 갱생 운동은 농가 부기(農家簿記)의 기장(記帳)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 경제 조사를 통해 ‘매인당(每人當) 평균 생활비’(물론 이것은 농촌 지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본 전체 평균은 1인당 100-110 円으로 기재되었음)를 추출한 후, 이 생활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작 토지가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해 내는 일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이것은 통상 ‘농가의 적정 규모’라는 개념으로 불렸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은 흑자 농가(黒字農家)를 창출한다는 일본의 정책적 목적 위에 자리했다. 다시 말해, 흑자 농가가 되기 위한 농가의 적정 경영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부기 기장의 결과가 분석되고 있었던 것이다. 흑자 농가란, 장차 국가의 중견(中堅)이자 민족의 토대인 이른바 ‘중농(中農)’을 의미하는 것으로,

21) 農林經濟局統計調査部, 農林省統計調査要綱輯覽 (각주 8), 57.

자가(自家) 노동력의 완전한 이용을 토대로 한 농가 경영, 가족 배양 능력의 구비, 높은 자급자족도 유지, 임금 노동자화나 불로 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가 그것이었다. 이 개념은 적정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농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농가(‘낙오 농가’), 중농의 대열에 오르지 못한 농가를 추출하여 이들을 분촌 이민(分村移民. 예를 들어, 만주로의 농업 이민 송출)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었다. 이 전반적인 기획은 통상 ‘흑자주의 적정 규모론’으로 불린다.²²⁾ 요컨대, 이 시기 농가 부기의 기장을 통해 이루어진 농가 경제 조사는 농가의 흑자주의 적정 규모론과 분촌 이민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했던 셈이다.

한 가지 첨언해둘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일본 농가 경제 조사의 근간에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의 농정학자 차야노프(Alexander Chayanov)의 소농 경제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근대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의 방법론적 체계를 세운 요코이 기요시는 차야노프의 소농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차야노프는 혁명(1917) 이전의 러시아 소농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임금 노동이 없는 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각종 실증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차야노프에 따르면, 가족의 노동의 한계 고통도와 가족의 소비 욕구의 한계 만족도 간의 균형이 농민 경제의 기본적 행동 원리이다.²³⁾ 차야노프의 이론은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의 한계 효용 개념을 사용하여 자급 자족적인 농가의 생산 활동을 설명한 것으로서, 자급 자족의 농가는 가족 노동에 의한 농업 생산물의 추가 1단위가 그 이상으로 농가의 식료 소비에 의한 한계 효용을 크게 하지 않고 나아가 가족 노동의 추가 1단위가 노동에 의한 고통, 즉 한계 불효용을 누적시키는 지점까지 노동 투입을 계속한다는 학설이다.²⁴⁾ 차야노프의 소농 경제론은 농가 세대의 현물 경제(現物經濟)와 자급 자족의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일본의 농정과 조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가족 노동(/자가 노동력)의 완전한 이용과 관련된 학설은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후술하기로 한다.

3. 식민지 조선의 농가 경제 조사의 계보와 특성

22) 平賀明彦, 『戦前日本農業政策史の研究, 1920-1945』(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3), 217-224; 김인수,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역사』 107 (2015), 181-215 중 201.

23) 『村敏』, “チャヤノフの農民論に對する一考察”, 『農業』 9 (1983), 131-142 중 131.

24) 尾崎佐藤正, “戦前期農家調査の可能性: 過去のハウスホールドから現在を見るために” (각주 13), 9.

12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8권 제1호 (2016)

1) 조사의 계보 및 연쇄: 조사의 배경, 목적, 방법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농가 경제 조사는 조선 통감부 주관으로 시행된 조사, 1910년대 초에 농상공부에 의해 실시된 조사, 1910년대 초중반에 조선 농회 주도로 실시된 개별적 농가 경제 조사, 1918년의 재무국 조사, 1922년의 사회과 조사, 1930년의 조선 농회 주관의 각 도별 조사, 1933/1938년의 농림국 조사 등이 있다.

官報
(International)

富時敏
頃ヲ左ノ通改

ノ取戻又ハ名

京城府黃金町

內正穀
轉位置

內正穀

官通牒第三百十六號
大正三年九月一日
各道長官宛
農家經濟調査ノ件
貴管内農家經濟狀態左記様式ニ依リ御取調ノ上御回報相成度此段及通牒候也
(様式)

○通牒

農商工部長官

農家ノ程度		農		道名	
		農家ノ程度	農		
調査地	郡	面	里	調査期	大正年月日
家族労働人員者	男	人	非労働者	男	人
女	人	内	老人	人	人
	小兒	人	常雇	男	人
	女	人	人	計	男女
					人
土地	所有地	小作地	備考		
地目	自作地	小作ニ付ス	計		
田	町	區	畝		
宅地	町	區	畝		
山野	町	區	畝		
其他	町	區	畝		
計					

그림 2. 農家經濟調査ノ件 (출처: 朝鮮總督府官報, 1914. 9. 1)

① 1910년대의 조사

우선 조선 통감부 주관으로 시행된 조사는 당시 한국으로 이민한 일본인 농업 경영자들의 경영 수지 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朝鮮總督府通計年報와 朝鮮總督府通計年報에 게재되었다. 토지 구입 가격, 작물별 단보(段歩)당 수익과 생산비(지출 금액)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농지 구입이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암시하였다. 말하자면, 이는 일본인 이민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조사이다. 다음으로 [그림 2]는 농상공부 지시로 1914년에 실시된 농가 경제 조사의 조사지 양식인데, 조사 내용은 가족 인원, 토지, 경작 면적, 사육 동물, 대차금과 대금, 1년간의 수입과 지출, 수지 차액 등이었는데,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항목을 보면 가계비와 농업 경영비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농가의 자산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고 지출 부분에서 자가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다. 이 조사는 각 도에서 도의 일반적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곳 수 개 소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상농(上農), 중농(中農), 하농(下農)에 대해 조사하였다.²⁵⁾ 이 외에, 조선 농회에서 펴낸 『조선 농회보(朝鮮農會報)』에서는 지역 단위의 조사 내용이 산발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1918년 조선 총독부 재무국 임시 관세 조사과는 각 지역의 금융 조합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금융과 경제 제6호 부록(金融と經濟 第6號 附錄)』으로 편집해서 보고하였다.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농가 경제 상황 조사서(農家經濟狀況調査書)』였다. 이 조사는 금융 조합 소재 지방에서 조선인 농가를 상류, 중류, 하류의 3개 계급으로 나눠 대표적인 1가(家)를 각각 선택하여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조선 전체의 금융 조합 267개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물은 각 도별 평균치로 제시되었다. 조사 시기는 1918년 8월과 9월이었고, 조사 내용은 기왕의 1년간 자산 및 수지의 현황이었다.²⁷⁾ 조사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 가족 수(동거인과 雇人 포함), (2)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純財産), (3) 수입(부동산, 동산, 직업, 부업, 기타), (4) 지출(식료비, 의료비, 주택비, 재산 관리비, 조세 기타 공과, 교육비, 기타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본격적인 농가 경제 조사로 보기에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 상류, 중류, 하류라는 계급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조세 행정을 추구하는 재무국의 관심 속에서 농가의 금융 조사가 강조되어 있었을 따름이었다. 특히, 조사 항목(수입/지출) 안에 농가의 경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부재했고, 결국 농가의 자산 규모를 측정하여 담세 능력과 관련된 조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조사를 같은 시기 일본의 제국 농회에서 1913-1915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조사가 각 현별(縣別)로

25) “農家經濟調査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14. 9. 1, 1-3면. 농상공부에서 각 도의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통첩하여 그 관내 郡의 상황을 조사, 회보하게 한 것이었다(“농가 경제 상황 조사”, 『매일신보』, 1914. 9. 3.).

26) 1910년대 초중반 조선 농회가 실시한 조사의 상세한 내역은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통계청, 1992), 406-4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朝鮮總督府財務局臨時關稅調査課調査, “農家經濟狀況調査書”, 『金融と經濟 第6號: 附錄』(1918. 10), “凡例”.

자작농, 자작겸 소작농, 소작농 가운데 ‘중등 농가’, 또는 ‘중용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조선 내 조사의 경우 표본을 도(道) 단위에서 책정하고 상농, 중농, 하농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출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송순에 따르면, 1910년대 초 상농·중농·하농의 구분에 따라 농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대한제국 초기부터 한국에 들어와 권업 모범 장기사로 재직해왔던 사카사키 기사부로(向坂幾三郎)가 행한 방식으로, “조사 대상 농가의 선정 기준과 계층 구분 등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현지 농민들의 평가에 따른 구분”이었고, 따라서 마을 단위로 부유함과 빈곤함이 상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상농의 경우 최대 논 21.5정보, 밭 6반보를 소유한 농가와 최소 논 6반보, 밭 8반보를 소유한 농가로 그 편차가 컸다.”²⁸⁾ 1918년 재무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상류’로 분류된 범주 역시, 답의 면적에서 최대(30.91, 경남)와 최소(1.94, 함남)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²⁹⁾

실제로 상농·중농·하농(또는 상류·중류·하류)의 분류는 지극히 관념적인데다가 지주·자작·소작을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농가 등급 분류와는 거리가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농/상류’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로 그 내적 구성에서 편차가 큰 범주를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의 구성 역시 당시 일본 및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사에서 활용된 각 농촌 계층별 ‘중등 농가’ ‘중용 농가’에 비해 농가의 평균적인 수지 현황을 추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조사 기법상의 문제이기 이전에, 일본과 조선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조사 실행 능력, 예를 들어 표본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인구 파악과 관련된 행정 능력의 차이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조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조사 목적),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조사 역량)에서 제국-식민지 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28) 이송순, 앞 논문 (각주 6), 91.

29) 朝鮮總督府財務局臨時關稅調查課調査, “農家經濟狀況調査書”; 이송순, 앞 논문 (각주 6), 98에서 재인용.

② 1920년대의 조사

1920년대의 대표적인 농가 경제 조사로는 1922년 내무국 사회과의 지시에 의해

표 2 전 조선 농가 1호당 수지 평균표 (△는赤字)

	경작 규모	수입(圓)	지출(圓)	차액(圓)
지주	20 町以上	10,712	5,130	5,582
	20 町以下	2,236	1,532	704
	5 町以下	954	714	240
	1 町以下	467	420	47
작농	3 町以上	1,237	1,004	233
	3 町以下	732	635	97
	1 町以下	441	401	40
	1 反以下	314	297	17
자작겸 소작농	3 町以上	1,015	924	91
	3 町以下	595	551	44
	1 町以下	381	374	7
	1 反以下	241	242	△1
소작 농	3 町以上	248	808	16
	3 町以下	591	596	△5
	1 町以下	333	353	△20
	1 反以下	215	227	△12
窮農(耕作하지 않는 자)		101	106	△4

출처: 朝鮮總督府(善生永助 囑託), 朝鮮の小作慣習, 8.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 있다. 전라남북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펴냈고, 그 최종 보고서는 1925년 사회과 명의로 간행된 『농가 경제에 관한 자료(農家經濟に關する資料)』이다.³⁰⁾ 사회과의 이 최종 보고서는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 총독부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1929년 펴낸 『조선의 소작 관습(朝鮮の小作慣習—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二六輯)』에 보고서의 일부 자료가 인용되어 있어서, 앞의 도별 개별 보고서와 함께 조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젠쇼의 글에 따르면, 사회과의 조사에서 농가 수입은 수확 수입, 부업 수입, 기타 잡수입의 합산으로 산출되었고, 농가 지출은 생활비, 경작비, 공과금, 소작료, 잡지출의 합산으로 산출되었다. 단, 여기서 교제비와 관혼 상제비는 ‘생활비’로 계상하고 지주의 소작료 수입은 ‘수확 수입’ 난에 기재하고 토지 관리비는 경작비로 계상하였다.³¹⁾

30)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1992), 414-415.

31) 朝鮮總督府(善生永助囑託), 朝鮮の小作慣習(1929), 37.

이 조사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 지주.자작농.자작 겸 소작농.소작농.궁농 등 농가 등급의 분류 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2) 각 농가 등급 안에서 경작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시 4개씩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고, (3) 전반적으로 소작농과 궁농의 농가 경제 수지 상황이 적자로 피폐하다는 것과 함께, 경작 규모와 농가 경제 수지 간의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자료는 조선의 농촌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는 논쟁의 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경작 규모의 영세성’을 조선 및 동양 농업의 근본 문제로 설정하고 있었던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하여 식민 국가의 농정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식민 국가가 소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작농 창정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농가의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경작 규모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당시 확보된 조선의 농가 등급별 농가 호수 자료를 위의 자료에 접합하여 조선 전체의 적자 농가의 규모를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식민 농정의 실패를 비판하는 담론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³²⁾

요컨대, 1920년대의 농가 경제 조사는 식민지 사회에서 소작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는 가운데, 소작 문제의 양태를 관찰·측정하여 사회 문제화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식민 국가의 정책적 관심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전의 조사에 비해 농가 등급을 한층 더 세분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방식으로 사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조사가 설계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³³⁾

③ 1930년대의 조사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1930년대의 농가 경제 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930-1933년에 걸쳐 조선 농회 주관으로 5개 도(경기도 수원군, 전남 나주군, 평남 순천군, 경남 밀양군, 함남 함주군)에서 실시한 농가 경제 조사와, 1933년과 1938년에 농림국 농촌 진흥과에서 동일 농가의 농가 경영 실태와 농가 수지의 변동을 추적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한 ‘농가 경제 개황 조사’가 그것이다.

32) 金仁洙, “植民地の知識國家論: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性格論再考”, 『思想』 1067 (東京: 岩波書店, 2013. 3), 87-118.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박문규는 조선 농가 전체의 46.6%, 박문병은 63.9%가 적자 농가임을 통계적으로 추산해냈다.

33) 1925-1926년에도 전국적으로 농가 경제 조사(및 생산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식산국은 “조선의 소작 쟁의 대책을 강구하고 산업 개발의 기본 조사에 이용하기 위해 농가 경제 조사를 실시하였다.”(『朝鮮農會報』, 1925. 5.;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1992), 417에서 재인용) 이 조사는 애초 1924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13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일본 의회의 해산으로 기획이 무산된 바 있었다(『産業指導를 爲하야 農家經營調査』, 『동아일보』, 1924. 3. 20.]

조선 농회 주관의 조사는 피폐한 농촌의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농가의 농가 경영에 관한 수지와 가계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각 도별로 1개 부락을 선정, 그 안에서 다시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 가운데 각각 3 개호씩 총 9호를 선정하여 조사한 소규모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도내의 '표준 농가'라고 했지만, 조사 농가가 조사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일반 농가에 비해서 우량 농가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혀두기도 하였다.³⁴⁾ 다만 그럼에도 조사 방식은, 당시 일본에서처럼 장부를 농가에 직접 배포하여 기입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가의 지식 정도가 아직 낮은 조선"이기에 조사원을 1년 간 현지에 주재시켜 농가를 직접 조사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게 하는 형태로 "경비가 다대하게 들지만 조사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자평된 조사였다.³⁵⁾

이렇듯 조사원의 직접 파견에 의한 타계식(他計式) 조사는 근대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의 초기 조사에서나 보였을 법한 조사였지만, 장부 기장에 관한 지식 및 언어 등에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이민족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18-1921년 간 식민지 대만에서 실시된 농가 경제 조사에서는 총 91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파견된 조사 담당자의 수가 총 121 명이었다.³⁶⁾ 이 121명 가운데 일본인이 80명이었고 한족이 41명이었는데, 이 점은 현지 한족이 통역을 담당하고 일본인 담당자가 조사표의 기입 사항을 체크하는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암시한다.³⁷⁾ 이런 사정은 1930년대 초반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30-1933년의 조선 농회의 조사는 촌락의 개황 조사와 호별 조사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호별 조사의 결산 항목을 살펴보면, (a) 가족의 인원과 노동 능력, (b) 작물별 경작 상황, (c) 농업용 토지의 지목별 소유 및 차입지 면적, (d) 농업 자본, (f) 농업 외 재산, (g) 농업 수입, (h) 농업 경영비, (i) 노동 상황, (j) 농업 수지 계산, (k) 가계비, (l) 가족 1인당 가계비, (m) 농업 총수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의 구성에서 볼 때, 이 조사의 방법론적 전거는 일본의 1921년의 조사로 특정할 수 있다. 일본의 1924년 조사와 달리, 경영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중간 생산물의 표시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다만, 노동력 조사의 경우, 일본의 1924년 조사에서 발견되는 노동 능력의 측정 지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朝鮮農會, 『昭和5年度農家經濟調査(京畿道ノ分)』(1932), 序.

35) 같은 자료, 1-2.

36) 臺灣總督府殖産局, 『農業基本調査書 第5—臺灣農家經濟調査 第2報』(1923).

37) 佐藤正正, 『帝國日本と統計調査』(東京: 岩波書店, 2012), 272-273. 참고로, 저자는 조사 기법과 결산 내용의 분석을 통해, 대만에서 실시한 조사(1918-1921)의 모델이 1913년 일본 제국 농회의 조사라고 추정하였다.

이 가운데 가족의 노동 능력, 농업 경영비, 가계비, 노동 상황 항목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1930년의 경기도 조사를 예로 들면, 우선 가족의 노동 능력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환산율을 통해 계산되고 있다. 환산 지표의 구체적 실물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 능력 기준을 제시한 자작농 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37세 남성과 19세 남성이 1.0, 39세 여성이 0.8, 15세 남성이 0.5, 18세 여성이 0.6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당시 일반화된 양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8)

표 3. 연령 및 성별 농업 노동력 환산율 (19-50세의 성인 남성 노동력이 기준 = 1.0)

연령	10-14	15-16	17-18	19-50	51-55	51-60	61-70
남	0.3	0.5	0.8	1.0	0.9	0.8	0.7
여	0.2	0.4	0.6	0.8	0.7	0.6	0.5

출처: 朝鮮總督府, 自力更生彙報 創刊號 (1933), 8; 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狀況調査 (1940), 6.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식민 국가가 가족 인원에게 이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농가의 '소재 노동 능력'을 수량적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농정의 방향을 결정했다.

다음으로, 농업 경영비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농가의 평균으로 노임(勞賃)이 23%, 비료대가 17.51%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⁹⁾ 가계비의 경우, 제1생활비(주거비, 음식비, 피복비, 광열비, 집기비)와 제2생활비(수선비, 교육비, 교제비, 諸掛[조세 공과, 회비, 회사금, 기부금 등], 기호비, 오락비, 보건 위생비, 관혼상제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⁴⁰⁾

2) 식민지 조선의 농가 경제 조사와 자력갱생 운동

1930-1933년 조선 농회의 조사는 비교적 표본의 크기가 작은 편이었고 조사상의 크고 작은 난점, 한계가 있었지만,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정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은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농정의 목표는 1932년 말에 간행된 전라남도(1930년도 조사분)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하여 설정되었다. 한

38) 朝鮮農會, 昭和 5 年度農家經濟調査(京畿道 / 分) (1932), 35.

39) 같은 자료, 14.

40) 같은 자료, 19-21. 그런데 '생활비'에서 이러한 조사 항목의 구분은 관혼상제 등 제2생활비의 근검 절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제를 양산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 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 농촌은 바야흐로 경제 파탄이란 난파에 부딪쳐 있고 태산같은 부채에 눌리어 ... 부채를 지게 되는 최대의 원인이 식량 부족과 冠婚 때문이었다는 것이 최근 고원군의 조사 통계에 의하여 나타났다" ["冠婚喪祭의 經費가 農家負債의 大宗 食糧負債는 莫不得已한 事情이나 高原郡의 農村經濟調査", 동아일보, 1934. 2. 25.]는 기사도 접할 수 있다.

신문 기사는 조선 농회의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농가 경제 수지의 현황을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작농이 27.7원의 적자, 소작농이 30.1원의 적자를 냈고, 유일하게 자소작농이 16.5원 흑자를 냈다.⁴¹⁾ 흥미로운 점은 이 적자의 최대 원인으로 조선 농촌의 가족 노동의 일수(日數)가 지극히 적고 불로일수(不勞日數)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지목되었다는 점이다.

총독부가 조사한 최근 1년의 조선 농가의 수지 계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자작 겸 소작농의 경제 상태가 가장 좋아서 연 16원 56전의 흑자를 얻고 있다. 자작농 및 소작농은 적자이다. 적자의 원인은 자작농에서는 공과금 부담이 크고 가족이 거의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雇人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작농에서는 고율의 소작료와 노동 부족의 결과이다.⁴²⁾

조사에 의하면, 조선 농가의 노동 일수는 1인 1개년에 겨우 111.4일로 잔여의 250여일은 無爲로 지나고 있다. 이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촌 자력갱생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본부[조선 총독부-인용자]의 의향이다.⁴³⁾

조선 농가의 노동 상태 조사—(총독부) 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시국 타개의 열쇠를 얻었다고 보증하고 있는데—에 따르면, 내지[=일본]의 농가 1개년 평균 노동 일수는 200일인데 조선 농가에서는 111일이다. 1일의 노동 시간을 9시간으로 하면 조선 농가의 1개년 평균에서는 (매일) 3시간의 노동이다. 고용원(雇傭員)을 쓰고 있는 조선 가정을 보더라도 1개년에 327일. 조선 농가의 일당(日當) 평균은 96전이어서 일반 노동 보수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인데, 그들은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작 농가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자작 겸 소작농이 겨우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축재(蓄財)에 결핍이 있고, 소작농은 한층 더 비참하다. 모든 자가 노동(自家勞動)의 경제화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다. 피폐의 원인을 숫자적으로 판명한 총독부에서는 금후 잉여 노동력의 소화에 눈을 돌려 농민의 자작(自作)을 자극함과 함께, 가내 공업, 기타 부업의 장려를 추구하려 한다.

44)

총독부에서는 농가의 경제 조사에 관련하여 농가의 노동력 조사를 행하게 되어 조선 농회와 협력하여 이에 해당할 계획을 할 터이다. 이는 조선 농업 경영이 매우 미발달

41) “朝鮮農會農家經濟調査”, 京城日報, 1932. 10. 4.

42) “自作, 小作農は餓死線上を走る: 朝鮮農家經濟の調査”, 매일신보, 1932. 10. 31.

43) “農家の收支狀態 小作農の收支는 圓十三錢不足, 一人一個年勞動日數는 三分之一, 剩餘勞力を活用”, 매일신보, 1932. 10. 20.

44) “(鮮農勞動調査) 余剩勞力の利用を促す: 農家の自覺に望へ副業をうんと起す”, 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2. 10. 29. 소위 ‘민족 언론’에서도 해당 통계에 근거하여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朝鮮農家赤字의 十三圓七十七錢: 農林局의 調査統計”, 동아일보, 1932. 10. 31.].

상태에 있고 농가 경제가 매우 불량한 이유는 농업 경영의 결함, 그 중 노동 시간의 근소 내지 노동력의 불합리한 분배에 기인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즉 농가의 노동력을 효과적 또 능률적으로 하도록 이 조사에 기초하여 지도하고자 한다.⁴⁵⁾

요컨대, 조선의 농가 세대 안에서 조달 가능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농가의 '잉여 노동력' 규모를 확인·추출하여 이를 완벽히 활용하기만 하면 농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이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수치에 입각한 '단단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한 연구는 일본과 조선의 연간 1인당 평균 노동 일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⁴⁶⁾

표 4. 연간 1인당 평균 노동 일수의 비교 (조선 vs. 일본)

	조선	일본	차(差)
농업 노동	61일	168일	107일
가사 노동	90일	101일	11일
기타 노동	18일	29일	11일
합계	169일	298일	129일
잉여 노동력	196일	67일	129일(-)

출처: 조선 쪽은 조선 농회 조사(경기도 수원군, 1930년도). 일본 쪽은 제국 농회 조사(233호에 대한 조사)

47)

이후, 조선 총독부는 종전까지 조선 농회 주관으로 시행했던 농가 경제 조사를 농림국의 사업으로 돌리고,⁴⁸⁾ 1933년 1월 말에 농촌 진흥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방침을 결정하였다.⁴⁹⁾ 조사의 세부 항목은 가족의 노동 능력, 겸업, 농업 경영 상황, 토지 이용 상황, 경제 상황, 현금 수지, 현금 지출, 부채와 예금, 현물 경제 상황, 노동력 등이었다.⁵⁰⁾ 그리고 이 조사 방침의 결정과 함께, 1933년 3월에 정부 총감 통첩 “농가 경제갱생 계획에 관한 건(農家經濟更生計劃に關する件)”이 발표되었다. 이 통첩안에 의거하여 농림국 농촌 진흥과 주관으로 농가 경제 조사와 농가 갱생

45) “農家の勞力調査 合理化가 目標”, 『매일신보』, 1932. 12. 1.

46) 増田收作(朝鮮總督府囑託), “剩餘勞力の消化について”, 『自力更生彙報』 5 (1933), 12.

47) 増田收作은 이를 ‘생산 증가가 가능한 노동력’으로 규정하였다.

48) “農家經濟調査, 明年度부터 總督府直營”, 『동아일보』, 1932. 11. 11.

49) 조사 방침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선 독자의 방법’이 강조되었다. 조선의 농업 경제 조직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당시 농림성이나 제국 농회에서 하는 조사 방법은 오히려 조선 농가의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문제가 있고, 특히 조선만의 지주-소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주의 생산비를 계상해야 하고 지주 등 지역 유지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또, 조선 쌀의 생산비 결정에서 통상 조선의 저렴한 노동 임금을 논하는데, 조선 농업 노동자의 낮은 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新規事業として農家經濟調査: 愈よ明年度から行ふ 獨自の調査方法を樹立する”, 『大阪朝日新聞-朝鮮版』, 1933. 2. 15; “農家の經濟調査, 今春四月부터 施行: 作人か 地主の 特殊關係에 置重, 獨自の 方法を 樹立?”, 『동아일보』, 1933. 2. 17.].

50) “農家經濟 基本調査, 今日 農村振興委員會 協議”, 『동아일보』, 1933. 1. 31.

운동(자력갱생 운동)이 동시에 실행되었다. 농가 경제 조사와 갱생 운동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조사는 일본의 1930년대 조사와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겸업 농가의 수지 상황을 파악하려는 관심은 일본의 농가 경제 조사에서 1931년의 개정의 취지에서 밝힌 바, 제1종 농가(전업 농가)와 제2종 농가(겸업 농가)의 구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이 조사의 결과는 1940년에 『농가 경제 개황 조사(農家經濟概況調査)』로 편집. 출간되었다. 제1부는 '자작농의 부(部)', 제2부는 '소작농의 부(部)'로 편집되었다. 이 조사는 1933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5년 뒤인 1938년 동일 농가를 추적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종의 시계열 자료가 생산되었다. 1933년 농가 갱생 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농가가 그 모집단이었고, 그 가운데 가족 구성, 노동 능력, 농업 경영 등 여러 요소에서 비교적 평균(中庸)에 해당하는 농가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소작농의 예를 들면, 조사된 농가의 수는 총 1,778호로 읍면당 평균 1개 호였다. 지역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남선구(南鮮區) 652호: 전북(146호), 전남(216호), 경남(90호), 경북(200호)
중선구(中鮮區) 560호: 경기(231호), 충북(92호), 충남(87호), 강원(150호)
서북선구(西北鮮區) 516호: 황해(195호), 평남(119호), 평북(90호), 함남(78호), 함북(34호)

이 조사는 조사이기에 앞서 그 목적상 '갱생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였고, 결국 5개년에 걸쳐 진행된 조선 총독부의 농정 성과를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파간다로서의 조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이 1933/1938년의 농가 경제 조사는 자력갱생 운동과의 연관은 물론, 조선 농촌에서 진흥 운동을 실현해 갈 이른바 '중견 인물'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농정 기획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지도 갱생 부락을 설정하여 농가 경제 조사를 해가는 가운데, "각 갱생 부락의 현황조사는 ... 군, 면, 학교, 금융조합원은 물론, 부락의 실정에 정통한 중심 인물, 지도원, 구장 등도 입회하게 하여 청취 조사를 했는데, 군에서는 군수 이하 다수 직원이 수일에 걸쳐 지도와 격려를 하였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 개입과 더불어

51) 1933년 3월 창간된 『自力更生彙報』(조선 총독부 발행)의 창간호에는 "農家經濟更生計劃指導要綱"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1933/1938년 조사의 지침과 구체적인 설문 양식이 담겨 있다.

52) 해방 이후 1948년 한국에서는 일제 시대의 이 농가 경제 조사를 典例로 삼아 '민족적 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금융 조합 주관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산간, 평야, 중간의 3개 지대로 나눈 후 선정한 총 45개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관련 사항은 李獻榮, "農家經濟調査의 概念과 實施內容", 朝鮮金融組合聯合會, 『金融組合』(1948. 10) 참조.

촌락의 지도자들을 발굴,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랐는데, 자력갱생 운동의 브레인 격이었던 야마자키 노부요시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도를 접할 수 없는 다수의 민중을 상대로 호별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곤란한 일이다. 수(數)의 관념이 결핍되어 있고 기장(記帳)의 관습이 없는 곳에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 역시 무리”였다.⁵⁴⁾ 자력갱생 운동에 문맹 퇴치의 생활화를 하나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넣은 것도 조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문맹 퇴치는 우선 가계부의 기장이 가능해지고, 갱생 계획의 언문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데에까지는 해두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를 위해 “본 조사와 함께 부락의 시설로서 문맹 퇴치의 야학회, 강습회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출되기도 했다.⁵⁵⁾ 식민지화 이래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식민 국가의 농가 경제 조사는 여전히 고단하고 난망한 사업이었던 셈이다.

3) 농가 노동력과 미국 생산비의 측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가 경제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에 필요한 행정 능력의 편차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 최종적인 귀결은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을 규정한 자력갱생 운동과 이에 연동된, 방금 위에서 다룬 ‘농가 개황 조사’(1933/1938)였다. 이미 앞에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이 조사와 갱생 운동의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1930-1933년에 걸쳐 진행된 조선 농회의 조사였다. 조선은 일본과 달리 농가 세대 내에 방대한 양의 잉여 노동력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임금 노동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가족 노동으로 벌충—농가 노동의 탈 시장화, 탈 임노동화—하여 농가 경제 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 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이었다. 가족 세대의 잉여 노동력 투입을 통한 경영의 집약화, 겸업을 통한 경영의 다각화, 농가의 비자본주의적 자금자족 등 갱생 운동의 의제는 바로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 축구된 사항들이었다. 조선 농가의 현실은 차야노프의 소농 경제론에 따라 가족 세대원의 추가 노동 단위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53) “(咸北)第二次更生指導部落の現況調査, 計劃樹立上の一考察”, 『自力更生彙報』12 (1934), 8.

54) 山崎延吉, “『自力更生彙報』の創刊に就いて”, 『自力更生彙報』創刊號 (1933), 3. 山崎延吉 (1873-1954)는 도쿄 제국 대학 농과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치 현 잠업 학교와 아이치 현립 안조(安城) 농림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아이치 현 농사 시험장의 장을 지냈다. 당시 아이치 현은 ‘일본의 덴마크’로 불릴 정도로 농촌 갱생의 선진 모델로 여겨졌다. 야마자키는 전국적으로 농촌 자치와 농본 주의를 역설하는 강연 활동을 벌였다. 1920년에는 제국 농회 간사에 취임했고, 1928년에는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1932년에 조선 총독부 축탁이 된 후 농촌 진흥 운동, 자력갱생 운동을 지도했다. 호는 我農生이다.

55) 八尋生男, “農家更生五年計劃の第三次樹立に際して”, 『自力更生彙報』17 (1935), 12.

56)

정책 당국의 핵심인 조선 총독부 농림 국장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는 ㉠ 자력갱생 회보㉡에 농가 노동력 조사의 취지를 소개한 글을 실은 바 있다.

농가의 소재 노동력을 알고 잉여 노동력을 밝히는 것이 농가 경제 갱생의 기초이다. ... 조선의 현상(現狀)을 보면 농업에 소요되는 노동 일수는 1인당 1년에 70일-120일 사이가 보통이다. ... 조사의 대상이 된 각 농가들은 모두 1호당 평균 300-600일 정도의 많은 잉여 노동력을 보이고 있다. 장래 경제 갱생 계획에서도 이상적으로는 일본의 정농가(精農家)처럼 (1인당 1년간) 300일을 목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가 노동력의 완전한 소화를 도모해야 하겠지만 이에 도달하는 것이 무리인 이상, 실제로는 현재의 노동력에 50-100일 내외의 노동력을 더하는 것으로 갱생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⁵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일본의 농촌 갱생 운동은 농가의 토지 생산성 지표를 통해 농가 경영의 흑자를 낼 수 있는 농가(‘적정 규모의 농가’)를 확정. 창출하고 거기에 미달한 적자 농가(‘낙오 농가’)를 창출하여 ‘분촌 이민’시킨다는 기획으로 이어졌는데, 조선의 농촌 갱생 운동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셈이다. 바꿔 말해, 농가 노동의 태만을 지적하고 가족 노동의 전면적 투입과 그 완전한 소화를 통해 노임(勞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의제가 정향(定向)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 농업이 아직 유치하여 개발과 자력갱생의 여지가 많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었다.⁵⁸⁾ 또, 가족 내 여성 노동을 비롯한 잉여 노동력을 부업에 투입함으로써 농업 경영을 다각화하고 이로써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도 부상했다.

그런데 식민 국가가 농가에서 잉여 노동력을 계산하는 방식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자의적 전제들에 기반 것이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의 산출 과정이 그러했다. 잉여 노동력의 산출식은 “소재 노동력-소요 노동력=잉여 노동력”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소재 노동력은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노동 능력을 검정한 것에 기초하여 매월 마다의 농업 노동력을 모두 합한 수치였다. 노동 능력의 평가는 [표 1]의 “연령 및 성별 농업 노동력 환산율”에 근거하여

56) 아울러, “소농으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비자본주의적 경제 생활, 즉 물건 본위[物本位]로 지도 방침을 삼는 자급경제에 입각하게 하고, 소득 본위를 지도 원리로 하는 교환 경제와 조화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농의 본질에 적합하도록 [新貝肇, “農村振興運動の現在と將來”, ㉠自力更生彙報㉡ 18 (1935), 8.]이라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차야노프의 소농 경제론의 연장이다.

57) 渡邊忍(朝鮮總督府農林局長), “大觀小言”, ㉠自力更生彙報㉡ 3 (1933), 3.

58) 増田收作(朝鮮總督府囑託), “農村振興十題”, ㉠自力更生彙報㉡ 10 (1934), 8.

계산한다. 소요 노동력은 각종 농업 관계의 작업에 요구되는 매월의 노동력을 조사하여 이를 모두 합한 수치였다.⁵⁹⁾ 소요 노동력은 농가 경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제 수치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소재 노동력에 대한 평가에 있었다. [표 4]의 “연령 및 성별 농업 노동력 환산율”은 어떤 경험적 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치가 아니라,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제시된 수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나마 근거라고 한다면 독일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표 1]의 “농업 노동 환산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 정도일 뿐이었다. 결국, 식민 국가는 가정(假定)된 수치에 근거하여 잉여 노동력의 규모를 측정·계산하고 있었고, 이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1930년대 식민 농정의 큰 방향을 결정짓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 식민 국가는 물론 일본 제국도 농업 노동의 능률을 경험적으로 조사·측정한 적이 없었고, 그저 인구 구성(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가정에 기초한 추계치를 내고 있는 수준이었다.⁶⁰⁾

나아가, 당시 조선 농가의 미국 생산비를 조사한 한 연구는 생산에 투입된 자가 노동(自家勞動, 가족 노동)과 고용 노동(임금 노동) 간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조사 농가에서 고용 노동은 평균 36.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자작농의 경우를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은 47.71%가 고용 노동이고, 일본은 16%로, 격차가 약 3배에 이르렀다. 식민 국가의 농정 기관은 이를 조선의 가족 노동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지만, 해당 연구는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고용 노동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시하였다. 즉, (1) 자연적 조건, 특히 강우량과 그 계절의 원인으로 작업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경향, (2) 품종의 통일에 따른 일시적 폭증, (3) 부인이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일이 적은 것, (4) 작업 능률이 낮고 좌식(坐食)을 존중하는 습관, (5) 미작 단일 경영으로 노동력 분배에 편중이 심한 것, (6) 토지 집중과 농촌 실업자의 증대에 따른 일반의 농촌 사정 등이 그것이었다.⁶¹⁾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조사자의 편견이 반영된 담론이었지만, 조선 농촌 경제의 구조적 조건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민 국가의 자력갱생 운동은 식민 지배 하에서 발생한 미작 단작의 폐해와 토지 집중의 문제, 그리고 생산성의 고양에

59) 八尋生男(朝鮮總督府囑託), “勞力調査とその應用”, 自力更生彙報 3 (1933), 7-8.

60)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 능률 및 노동 생산성에 대한 측정은 이훈구에 의해 수행된 바 있었다. 이훈구는 노동 능률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선 총독부 농정 당국의 농가 경제 조사에서 노동 능률이 경험적 토대 없이 관념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실시한 조사, 다시 말해 태평양 문제 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의 재정적·학술적 원조에 힘입어 비교적 자율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토지 이용 조사(1930-1931)에서 노동 능률을 직접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실문을 넣어 얻어낸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Hoon K. Lee,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김인수,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 이용 조사의 정치적 의미” (각주 22), 206.]

61) “朝鮮に於ける米生産費問題” (帝國農會 所載: (出典) 農林省米穀局, 朝鮮、台に於ける米穀生産費資料 (1935), 137-138).

필요한 외부적 자원, 예를 들어 비료와 축력(畜力) 및 기계의 활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데에서 발생한 식민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임금 노동 부분을 가족 노동으로 벌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정책에 불과했던 셈이다.⁶²⁾

이러한 정책은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조선 총독부 농림국의 1933/1938년의 시계열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교적 우량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갱생 운동의 추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노동에서 차지하는 연고(年雇), 계절 노동, 일고(日雇)의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 점은 임금 노동을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⁶³⁾

62) 식민지 조선에서 1930년대 자력갱생 운동의 실패는 그 시작 시점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운동의 추진자였던 야마자키 노부요시가 금융 조합 중앙대회에서 행한 강연에 대해 한 신문은 이렇게 평하였다. “(야마자키 노부요시) 씨는 대부를 엄격히 하여 부채 습관이 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물질보다 정신 방면으로 지도하라고 하였다. … 그는 말하기를, 조선인은 노동에 대한 관념이 없다, 조선인은 의존적이고 게으르다 하여 자립 정신을 운위하였다. … 오인(吾人)은 이를 인식 부족이라고 하고 싶다. … 현하 금융 조합의 담보 대부가 전체 대부액의 6할 이상을 점유한 숫자적 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서민 금융의 본연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는 바가 아닌가?”[“山崎延吉氏の 謬論, 朝鮮農民에 對한 認識不足”, ☐ 동아일보☐, 1932. 10. 8.]

63) 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査☐ (1940), 38-39.

4. 맺음말: 조사 권력의 미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동아일보☒의 한 사설은 1933년에 조선 농회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 사업[농가 경제 조사—인용자]이 종래의 조사에서의 오류를 청산하여 조선 농촌이 요망하는 진정한 정책에 도달하는 출발점을 정당화하였음에 그 의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연구와 관찰의 도정에서 불편부당한 분석을 행하여야만 결론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듣기로, 조사원의 노력만으로는 만전을 기할 수는 없으므로, 전 조선 각지의 유력 지주에게 조사위원을 촉탁하여 총독부 자문 기관으로 위원회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제 사정과 농민의 생활 상태는 농민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듣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그 조사의 결론은 불합리, 불완전한 그것이 되고 말 위험이 있을 것이다. … 아무리 조사의 출발 정신에 가치가 있고 결론의 타당성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조사의 정책 비판력이 당국의 무성으로 말미암아 축소된다고 하면, 그 본래의 의의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조선의 농촌은 그 사정의 수집, 통계,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단의 지식이 정책의 규범이 되어서 그를 구제해주고 유지해주고 발달, 진흥시키는 것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⁶⁴⁾

이 사설의 필자는 ‘조사의 정책 비판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조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필자에게 식민 국가의 조사, 통계를 그 취지와 목적, 개념화 및 범주화 양태, 측정 방법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상대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부재했다는 점이야말로 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사의 결과물로 생산된 통계는 사회적 실재에 대한 하나의 표상 체계인 동시에 그 자체로 권력 자원인데, 수량화(quantification)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⁶⁵⁾ 이 수량화된 지표 위에서는 ‘민족’이나 ‘비판력’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나 ‘객관성’으로 표상된 장(場)의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는 곧 인식론적 차원에서 비판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이제 식민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는(또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식민 국가가 생산해낸 통계의 수치만큼은 자명한 것으로 수용하고 또 그 수치에 전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 조사와 그 결과물에 기대 실천되는 사회 정책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64) “(社說) 朝鮮農家經濟調査: 問題는 그 政策批判力에”, ☒동아일보☒, 1933. 2. 19.

65) Theodore Porter, *Trust in Numbers: The Pursuit of Objectivity in Science and Public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7-8.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하거나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다른 방식의 사회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 조사가 대체로 통계를 산출하는 실천인 이상, 대안적 사회 조사라 할지라도 통계가 낳는 ‘수량화의 권력 효과’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결과물=통계’에서 은폐된 개념화와 범주화, 그리고 측정 지표화 과정의 역사성, 사회성, 관념성만큼은 조사 과정을 경험하는 주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안적 조사의 주체는 국가 기구나 주류적 사회 집단에 의해 진행된 지배적 조사의 개념, 범주, 측정 방법의 한계를, 그와 대등한 권력 자원 위에서 비판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다. 조사자는 자신이 산출해낸 사회 지표를 객관성의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사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동시에, 그 자신이 조사 현장에서 조사 및 통계 권력의 생성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 심지어는 이를 만들어온 생산자로서 그 인식론적 한계를 성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대안적 조사를 수행해본 이는 통계 물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식민지 사회 과학 지식 생산의 역사 속에서 이들 사례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대안적인 조사의 물질적 자원—돈, 학술, 인력, 그리고 ‘금지’ ‘검열’로부터의 거리—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이미 생산된 통계치를 전유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 등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1930년대에 ‘조선 사회 성격 논쟁’을 통해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런 길이였다. 이때 불거진 새로운 문제는 통계의 전유 행위라는 수행성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어제의 혁명가들이 이제 현장을 떠나 책상에 앉아 통계로써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전문가로 전환되기 일췌였던 것이다(‘탈 혁명화’). 나아가 ‘숫자로 표상된 사회’를 다시 숫자를 통해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숫자에 대한 물신주의(statistics fetishism)는 보다 심화되었다.⁶⁶⁾ 이에 비해, 예를 들어 이훈구는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의 지원에 힘입어 돈, 학술, 인력,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치외법권’을 보유할 수 있었고, 노동 능력에 대한 경험적 지표화 등 식민 국가의 농가 경제 조사와는 다른 방식의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그 인식론적 한계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마련하였다.⁶⁷⁾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농가 경제 조사는 최종적으로 1930년대 식민 국가의 농가 갱생 계획 및 농촌 진흥 운동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조사의 계보에 있어서는 동시대 일본에서 행해진 조사를 방법론적으로 계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실행된 현실적·물리적

66) 대안적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의 통계로의 몰입(‘통계 물신 주의’)과 그것이 가져온

전문주의, 탈혁명화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金仁洙, “植民地の知識國家論” (각주 31)을 참고할 것.

67) 이에 대해서는 김인수,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의 정치적 의미” (각주 22)을 참고할 것.

조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행정 능력의 격차로 인해 제국-식민지 간 조사 능력의 차이가 현저했고, 또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론도 상이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조사의 결과로 제출된 '가내 잉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표상은 근면과 내핍,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아끼면 농가의 경제적 안정('수지 균형')을 얻을 수 있다는 식민 국가의 '정신 동원'적 비전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 비전은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대안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했던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객관'과 '과학'의 외투를 두르고 식민지 사회의 정신 구조, 경제 생활을 규정하였다.

조사를 통해 생산된 이 지식 권력은 제국 일본의 총력전 동원(1937-1945)으로 식민지 조선 농가에서마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도래하고 이로 인해 전시 농업 생산력의 위기가 운운되기까지, 그리고 이로써 그간 농가에 마냥 풍부하게 존재한다고만 믿어왔던 '잉여 노동력'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기까지,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식민지 사회의 모든 비판적 의견들을 누르고 '객관'과 '과학'으로 군림하였다. 시간이 지나 전시 노동력 동원의 현실에 의해 가까스로 그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 조사 권력의 실체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인식론적 폭로가 있기 이전까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객관'과 '과학'의 외양을 두른 인식 폭력(epistemological violence)이었던 셈이다.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 지표화의 방식이 고안되면서 사회 과학 전반에서 종전의 경험적 사회 조사의 지위는 점차 강등되고 있다. 또 진작부터 진행된 사회 조사의 수행자와 통계의 활용자 간의 분업/분리,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른바 '현장(field)'의 상실/종언이라는 사태 역시 사회 과학 지식 생산이 처한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 조사에 대한 실감, 다시 말해 조사 및 통계의 인식 폭력에 대한 비판 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사회를 숫자로 바꿔내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그 기술에 능수능란하며 이로써 사회적 실재를 길들이는(taming) 데 일가견이 있는 오늘날의 사회 조사 및 사회 과학은, 식민지 사회 조사 및 사회 과학의 미망이 주는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에 다시금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조사와 통계는, 언제나 그랬듯, 생각보다 울퉁불퉁하고 불투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The Genealogy and Political Meanings of Farmhouse Economy Investigations Conducted by Colonial Power in Colonial Korea

KIM In-soo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genealogy of farmhouse economy investigations (農家經濟調査) conducted by colonial power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aspect of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investigations. Farmhouse economy investigations implemented in colonial Korea adopted research techniques of Japan at that time. They were based on the theory of small farmer's economy (小農經濟理論) proposed by a Russian agricultural scholar, Alexander Chayanov. Especially, the investigation (1930-1933) carried out by Chosen Agricultural Association had crucial impacts on colonial agricultural policy in the 1930s.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Governor-General of colonial Korea found out that there were large amounts of surplus labor power in colonial rural society. Self-reliance movement (自力更生運動)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farmers to make ends meet by replacing wage labor with family labor. However, the formula calculating the size of surplus labor power was not based on empirical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it was not based on a scientific premise.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e colonial state had proposed a vision of spirit-mobilizing hard work and austerity. "Abstract hypotheses" proposed by the colonial state was recognized as "objective evidence" and defined the direction of social policy,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alternative and critical investigations. This urges the social scientists to reflect upon their own work in using historical documents and pay attention to political meanings of investigations.

Keywords. farmhouse economy investigations, colonial power, social science, surplus labor power, self-reliance movement